

저출산 가정의 출산 행동 및 배우자 애착

천 혜 정(이화여자대학교 교수)

I.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 목적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신세 못 면한다'(1963),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1971), '둘도 많다'(1982), '하나 낳아 젊게 살고 좁은 땅 넓게 살자'(1987), '사랑 모아 하나 낳고 정성 모아 잘 키우자'(1989). 그동안 정부가 가족계획을 위해 사용한 표어들이다. 1980년대까지 산아제한이 주를 이루던 정부의 인구정책이 불과 10여년 사이에 정반대의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논의로 바뀐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발단은 2000년대에 들어와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여성 1명이 가임기간 동안 각 세 될 평균 출생아수)이 1.47로 세계 평균 1.53보다도 낮다는데서 비롯되었다. 우리나라의 최근 10여년간의 합계출산율의 경향은 1.59~1.19사이에서 점진적 하락과 점진적 상승이 혼재하여 하락과 상승의 반복적 패턴을 보이고 있으나, 상승보다는 하락 추세가 강하여 우리나라의 저출산 경향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더군다나 서구의 경우 합계출산율이 6명대에서 1명대로 감소하기까지 100년 이상이 소요된데 비해 우리나라는 약 30여년 만에 1명대의 출산율 수준으로 급감한 것은 복지 제도가 미비한 상태에서 인구 전환이 급속도로 이루어져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낮은 출산율과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출산율 저하가 무슨 문제를 야기하는가? 우선 출산율의 감소로 노동인구수가 감소하여 노동력 부족을 가져오며, 낮은 사망률에 의해 노인인구수가 증가하게 되므로 노동인구의 노인인구 부양부담이 사회문제로 대두된다. 이것은 결국 국가 경쟁력의 약화를 초래한다. 즉, 출산력 저하는 노동력 공급, 국가 경쟁력, 그리고 경제 성장의 잠재력이라는 차원에서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이다(김승권, 2003).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반론이 제기되기도 하는데, 국토면적이 좁고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인구밀도는 여전히 세계 3위로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점, 출산율을 끌어올려 유년인구의 비율을 높인다고 하더라도 노인인구의 절대 규모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가 떠안아야 할 복지비용은 이중부담이 될 것이라는 점, 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산업구조의 고도화로 노동가치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생산 인구의 증가만으로 산업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여성신문, 2001. 7. 27).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저출산의 문제를 너무 인구학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출산이 인구학적 현상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출산은 대부분 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일어난다. 남녀가 결혼을 통해 가족을 형성하고, 자녀 출산을 통해 가족을 유지·확대한다고 볼 때, 출산은 남녀 또는 부부의 입장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즉, 저출산이 누구의 문제인지, 누구의 입장에

서 바라볼 것인가에 따라 문제의 성격과 해결방법이 달라진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저출산 현상과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는 또 다른 축은 저출산의 원인에 대한 것이다. 출산을 저하의 직접적 원인으로 결혼연령의 상승 및 결혼율의 저하, 그리고 기혼여성의 소자녀관 정착이 지적되고 있다(김승권, 2002). 또한 급속한 산업화 및 도시화, 성공적 가족계획사업,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증대, 결혼가치관 및 자녀가치관의 변화, 그리고 자녀양육 부담의 증가 등이 출산을 저하의 직접적 요인에 영향을 주는 간접적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다(김승권, 2003). 이와 같은 여러 요인들이 출산을 저하에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하지만, 출산을 저하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원인은 여성의 교육과 자아실현 욕구의 증가로 경제활동에의 참가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육아를 여전히 여성의 역할로 보거나 자녀양육의 책임을 개별 가정의 책임으로 돌리는 현상이라고 보여진다(한유미·곽혜경, 2004). 주요 언론들은 출산을 저하에 대해 “한국여성들의 출산과업이 시작됐다”(중앙일보, 2001. 7. 11)며 “낮은 출산율은 육아의 부담을 여성들에게만 맡겨둘 수 없음”을 경고하며 “(중앙일보, 2001. 7. 11) 육아는 개인 차원의 일이 아니고 한민족의 존속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중대사안”(서울경제, 2002. 9. 13)이기 때문에 “출산을 회복을 위해 범정부 및 민간 차원의 출산장려정책”(경향신문, 2003. 7. 11)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저출산 현상과 관련되어 수행된 연구들을 보면 출산을 저하의 원인을 이론적으로 탐색한다든지(김승권, 2002, 2003), 출산촉진요인과 출산억제요인을 식별하여 출산력의 추이를 예측한다든지(전광희, 2002), 여성의 사회참여와 출산율과의 관계를 분석하는(한유미·곽혜경, 2004) 등 정작 자녀를 1명만 둔 소위 저출산 가족의 여성과 남성, 부부의 가족생활 실태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편이다.

이에 본 연구는 1명의 자녀를 둔 기혼여성과 남성을 대상으로 그들의 가족생활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출산관련 행동으로써 앞으로 자녀를 더 출산할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자녀출산과 관련하여 배우자와 의견차이가 있는지, 있다면 그 심각성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저출산 가정의 여성과 남성은 자신의 부부관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배우자 애착의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저출산 현상이 지속될 때 야기될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해 저출산 가족의 당사자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정부가 내놓고 있는 소위 출산장려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1명의 자녀를 둔 기혼남성과 여성을 대상으로 그들의 출산관련 행동 및 배우자 애착의 특성을 살펴보고, 저출산 현상이 지속될 때 야기될 변화와 저출산 정책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는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1명의 자녀를 둔 기혼남성과 여성의 출산행동의 일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둘째, 저출산 가정의 배우자 애착의 일반적 경향은 어떠하며, 출산행동에 따라 배우자 애착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셋째, 저출산현상과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인식이 사회인구학적 배경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04년 6월 28일부터 8월 30일 사이에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며 지금 현재 자녀가 한 명인 기혼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저출산 가족의 출산행동 및 배우자 애착의 정도를 살펴보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일반적으로 가임기간이라고 받아들여지고 있는 25~45세 사이의 남녀에게 질문지를 배부하여 423부가 회수되었으나 불성실한 기재를 하였거나 연구에 적합하지 않은 63부를 제외한 총 360명(남 84명, 여 276명)이 최종적으로 연구분석에 포함되었다.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징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평균연령의 경우 남성은 36.15세(SD 4.55), 여성은 34.22세(SD 4.24)이다. 교육수준의 경우 남성은 4년제 대학 졸업이 44명으로 전체의 52.2%를, 대학원 이상이 22명(26.2%), 2년제 대학 졸업이 13명(15.5%)를 차지하고 있다. 여성은 4년제 대학졸업이 157명으로 전체의 약 60%를, 대학원 이상이 68명(24.6%), 2년제 대학 졸업이 31명(11.2%)를 차지하고 있다. 여성의 경우 응답을 하지 않은 43명을 제외한 233명 중 약 40%인 110명이 현재 취업 중인 상태였으며, 123명은 비취업중인 것으로 응답하였다. 비취업 이유는 취업경험이 전무한 37명을 제외하고는, 결혼하고 직장을 그만 두거나(60명), 아이를 낳고 그만두거나(37명), 혹은 결혼과 출산 이외의 이유로 그만둔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26명).

월평균소득은 약 4백만원 정도이며, 현재 경제수준을 0~10까지의 척도로 표기하게 한 결과(점수가 높을수록 경제수준이 높음을 의미함) 평균 4.93(SD 1.247)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향후 5-10년 사이에 가계 경제수준을 예상하게 한 결과 평균 6.77(1.27)로 나타나 현재보다는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구체적인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남성(N=84)	여성(N=276)
평균연령 (M, SD)	36.2(4.55)	34.2(4.24)
평균결혼연령 (M, SD)	29.8(2.66)	27.8(2.43)
결혼 후 첫 자녀출산시기 (M, SD)	1.58년(.85)	1.81(1.37)
교육수준 (%)		
2년제대졸 이하	18(21.5)	49(17.7)
대졸	44(52.4)	157(56.9)
대학원 이상	22(26.2)	68(24.6)
직업 (%)		
무직/주부	5(6.0)	131(47.5)
판매/생산/서비스	7(8.4)	7(2.6)
사무	31(36.9)	30(10.9)
전문기술/관리	36(42.8)	95(34.3)
학생	3(3.6)	9(3.3)
월평균가계소득(%)		
100~199만원	7(2.0)	평균 402.9만원
200~299만원	92(27.6)	
300~399만원	102(30.6)	
400~499만원	48(14.4)	
500만원 이상	84(25.2)	

3. 측정도구

1) 출산행동 실태

출산행동과 관련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이상자녀수, 출산에 대한 부부의 계획, 단산 이유 및 출산이유 항목을 구성하였다.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자녀의 수, 앞으로 자녀를 더 출산할 계획이 있는지의 여부를 배우자와 함께 둘다 원하는지, 응답자만 원하는지, 배우자만 원하는지, 혹은 둘다 더 이상의 출산은 원하지 않는지를 보고하도록 하였다.

단산 이유는 자녀를 출산할 계획이 없는 응답자에게 답하도록 하였는데, <보기>의 이유들 중 가장 중요한 순서부터 3개를 택하여 기입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인 단산 이유는 “과도한 사교육비를 포함한 경제적 부담” “육체적, 정신적 부담” “자녀에 대한 필요성을 못느낌” “자녀로 인한 개인적 시간이나 활동의 제약” “원치않는 성별의 자녀나 장애아가 태어날 것에 대한 두려움” “불임” “원만하지 못한 결혼생활이나 부부관계” “임신이나 분만과정, 출산 후 몸매 등에 대한 불만” “지구환경이나 인류존속에 대한 회의” 등 9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출산이유 역시 가장 중요한 순서대로 3개를 골라 기입하도록 하였다. 10개 항목은 “아들의 필요성 (가계계승)” “부모역할에 대한 만족감” “주변사람(시댁, 본가, 처가 등)들로부터의 권유 및 압력” “노후에 대한 두려움” “형제자매의 필요성” “자녀를 통한 대리만족” “종교적 이유” “자녀는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 “사회적 책임감(저출산으로 인한 국가경쟁력 약화 등)”이다.

2) 배우자 애착

Hauzen과 Shaver의 낭만적인 이성관계에서의 애착을 측정하기 위해 제작된 측정도구를 전효정(1996)이 17문항으로 간추려 번안한 것을 황은(2003)이 12문항으로 간추린 도구를 사용하였다. 5점 리커트 척도이며 Cronbach's Alpha는 .86의 신뢰도를 보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안정적 애착을 형성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3) 저출산 현상 및 출산장려 정책에 대한 인식

저출산 현상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6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진 척도를 구성하였다. 저출산 현상이 계속될 때 예측되는 변화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부터 매우 동의한다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였다. 긍정적 변화를 측정하는 3문항의 Cronbach's Alpha는 .72의 신뢰도를 보였으며, 부정적 변화를 측정하는 3문항의 Cronbach's Alpha는 .64의 신뢰도를 보였다.

출산장려정책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 혹은 고려중인 출산장려정책을 제시하고 각 정책에 대해 어느 정도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하여 전혀 효과적이지 않다부터 매우 효과적이다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Cronbach's Alpha는 .80의 신뢰도를 보였다.

Ⅲ. 연구 결과

1. 출산 행동의 일반적 경향

출산행동의 일반적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대상자들이 희망하는 이상자녀수에 대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명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많으며 2명 이상, 즉 현재의 1명보다 더 많은 자녀를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282명(78.3%)에 이른다. 성별, 경제수준, 그리고 취업여성인지 비취업여성인지에 따라 살펴본 이상자녀수의 실태도 크게 다르지 않다. 각 변인별로 chi-square를 실시한 결과 성별, 여성취업, 경제수준에 따른 이상자녀수의 수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1994년부터 조사된 우리나라의 이상자녀 수는 2.2명으로 1997년과 2000년에까지도 동일한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통계청, 1994, 1997, 2000),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의 이상자녀수의 평균은 2.04(759)명으로써 오히려 우리나라 전체 평균수치보다 더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2> 이상자녀 수

이상 자녀수	전체 (N=360)	성별		여성 취업		경제수준*		
	빈도 (백분율)	여 (N=276)	남 (N=84)	취업 (N=110)	비취업 (N=123)	상 (N=108)	중 (N=116)	하 (N=127)
1명	73 (20.3)	60 (21.7)	13 (15.4)	23 (20.9)	27 (22.0)	24 (22.2)	26 (22.4)	23 (18.1)
2명	212 (58.9)	159 (57.6)	53 (63.1)	57 (51.8)	78 (63.4)	60 (55.1)	70 (60.3)	75 (59.1)
3명이상	70 (19.4)	54 (19.5)	16 (19.0)	28 (25.5)	18 (14.6)	23 (21.3)	18 (15.5)	27 (21.3)

* 현재 가정의 경제수준을 0~10까지의 척도로 표기하게 한 결과(점수가 높을수록 경제수준이 높음을 의미함), 6, 7, 8, 9에 표기한 108명을 상집단, 5에 표기한 116명을 중집단, 2, 3, 4로 표기한 127명을 하집단으로 분류함

한편, 앞으로 자녀를 더 출산할 계획이 있는지를 배우자와 함께 둘다 원하는지, 응답자만 원하는지, 배우자만 원하는지, 혹은 둘다 더 이상의 출산은 원하지 않는지를 보고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본인과 배우자가 둘 다 자녀를 더 원하는 경우가 98명(27.2%), 본인과 배우자 둘 다 더 이상의 자녀를 원치 않는 경우가 154명(42.8%)으로 나타났다. 성별, 여성취업여부, 그리고 경제수준에 따라 출산 계획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chi-square를 실시한 결과, 성별에 따라 그리고 취업여성인지 비취업여성인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표 3> 출산계획

출산계획	전체 (N=360)	성별		χ^2	여성 취업		χ^2	경제수준			χ^2
	빈도 (백분율)	여 (N=276)	남 (N=84)		취업 (N=110)	비취업 (N=123)		상 (N=108)	중 (N=116)	하 (N=127)	
나와배우자 둘다원함	98 (27.2)	80 (29.0)	18 (21.4)	21.51 ***	22 (20.0)	43 (35.0)	11.60 **	33 (30.6)	26 (22.4)	38 (29.9)	7.002
나만원함	51 (14.2)	27 (9.8)	24 (28.6)		12 (10.9)	13 (10.6)		14 (13.0)	17 (14.7)	18 (14.2)	
배우자만 원함	52 (14.4)	45 (16.3)	7 (8.3)		17 (15.5)	27 (22.0)		17 (15.7)	22 (19.0)	11 (8.7)	
둘다 원치않음	154 (42.8)	123 (44.6)	31 (36.9)		58 (52.7)	40 (32.5)		44 (40.7)	48 (41.4)	58 (45.7)	

응답자가 보고한 단산이유 중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한 이유들을 살펴보면, 경제적 부담(84명, 23.3%) 육체적·정신적 부담(70명, 19.4%), 그리고 개인적 시간이나 활동의 제약(35명, 9.7%)의 빈도수가 가장 높았으며, 자녀에 대한 필요성을 못느낌(15명, 4.2%), 그리고 불임(9명, 2.5%)도 가장 중요한 이유로 언급되고 있었다. 단산을 하는 중요한 이유들은 여성, 남성, 취업여성, 비취업여성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위부터 3위로 단산이유에 언급된 모든 항목들의 빈도수는 <표 4>와 같다. 자녀 단산을 결정하는 중요한 이유는 개인적 시간이나 활동의 제약, 육체적·정신적 부담, 그리고 경제적 부담이 가장 높았고, 이외에 임신이나 분만과정, 출산 후 몸매 등에 대한 불안과 원치않는 성별의 아이나 장애아가 태어날 것에 대한 두려움도 중요한 이유로 지적되고 있었다.

<표 4> 1~3 순위에 언급된 단산이유의 빈도

순위	단산이유	빈도
1	개인적시간이나 활동의 제약	185
2	육체적, 정신적 부담	174
3	경제적 부담	172
4	자녀에 대한 필요성을 못느낌	60
5	임신이나 분만과정, 출산 후 몸매 등에 대한 불안	28
6	원치않는 성별의 아이나 장애아가 태어날 것에 대한 두려움	20

한편, 응답자가 보고한 출산이유 중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한 이유들을 살펴보면, 형제자매의 필요성(130명, 36.1%)이 압도적인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 외에 아들의 필요성(9명, 2.5%), 자녀를 통한 대리만족(8명, 2.2%), 주변사람의 권유 및 압력(7명, 1.9%), 자녀는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6명, 1.7%)이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1위부터 3위로 출산이유에 언급된 모든 항목들의 빈도수는 <표 5>와 같다.

<표 5> 1~3 순위에 언급된 출산이유의 빈도

순위	출산이유	빈도
1	형제자매의 필요성	145
2	주변사람들로부터의 권유 및 압력	66
3	자녀는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	64
4	부모역할에 대한 만족감	62
5	아들의 필요성	38
6	자녀를 통한 대리만족	19
7	사회적 책임감	18
	노후에 대한 두려움	14

2. 자녀출산에 대한 부부간의 의견 차이 및 배우자 애착

자녀출산에 대한 부부간의 의견차이가 있는 경우 이로 인한 갈등이 부부관계에 어느 정도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는지 전혀 심각하지 않다에서 매우 심각하다까지 5점 척도로 질문하였다. 응답자의 평균은 2.43(1.065)으로 보통 이하의 심각성 정도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성별, 경제수준, 여성의 취업여부에 따라 의견 차이의 심각성에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은 반면, 출산계획에 따라서는 의견 차이의 심각성에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즉, 본인과 배우자 중 한 사람만 더 출산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본인과 배우자 둘 다 출산을 원하는 경우보다 자녀출산에 대한 의견 차이를 더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비록 유의한 차이는 나오지 않았지만 본인과 배우자 둘 다 출산을 원하는 경우가 둘 다 원하지 않는 경우보다 의견 차이를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결과는 흥미롭다. 즉, 비록 부부간에 자녀출산 여부에 대한 합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출산을 하기로 합의한 경우는 잠재적인 갈등의 여지가 어느 정도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표 6>

<표 6> 자녀출산에 대한 부부 의견 차이의 심각성

	전체 (N=360)	남성 (N=84)	여성 (N=276)	t	취업여성 (N=110)	비취업여성 (N=123)	t	
의견차이 (M, SD)	2.43 (1.06)	2.39 (1.14)	2.45 (1.04)	-0.378	2.37 (1.19)	2.56 (.88)	-1.216	
	경제수준 하 (N=127)	경제수준 중 (N=116)	경제수준 상 (N=108)	F	나와배우자 둘다원함 (N=98)	둘중 한 사람만 원함 (N=103)	둘다 원하지않음 (N=110)	F
의견차이 (M, SD)	2.48 (1.057)	2.56 (1.159)	2.26 (.966)	1.932	2.44ab (1.04)	2.61a (.89)	2.28b (1.18)	2.47*

한편, 배우자 애착의 일반적 경향과 성별, 경제수준, 여성의 취업여부, 자녀 출산 계획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았다.

<표 7> 사회인구학적 배경에 따른 배우자 애착

	전체 (N=360)	아내 (N=276)	남편 (N=84)	t-test	취업여성 (N=110)	비취업여성 (N=123)	t
애착 (M, SD)	47.06 (6.42)	46.90 (6.50)	47.58 (6.17)	-0.850	47.01 (6.46)	46.73 (6.47)	.337

	경제수준 하 (N=127)	경제수준 중 (N=116)	경제수준 상 (N=108)	F	둘다 원함 (N=98)	나만 원함 (N=51)	배우자만 원함 (N=54)	둘다 원하지않음 (N=154)	F
애착 (M, SD)	45.685a (6.00)	47.0776ab (6.72)	48.3889b (6.21)	5.372**	48.83b (5.60)	45.66a (6.68)	47.11ab (6.32)	46.35ab (6.62)	4.041**

<표 7>에서 보듯이 성별과 여성의 취업여부에 따라서 배우자 애착 수준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경제수준과 출산계획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는데, 경제수준이 높은 경우에 배우자 애착 수준도 높은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배우자와 본인이 둘 다 더 자녀를 출산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배우자 애착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저출산현상과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인식

앞으로 저출산 현상이 계속될 때 예측되는 변화에 대한 동의 정도를 전혀 동의하지 않음부터 매우 동의함까지 5점 척도로 질문하였다. 생활환경의 개선, 생활비감소, 자녀양육부담감소를 저출산으로 인한 긍정적인 변화로, 국가경쟁력 약화, 소비시장 위축, 가족해체 증가를 저출산으로 인한 부정적인 변화로 묶어 비교한 결과, 연구 참여자 전체는 긍정적 변화 3.16(.89), 부정적 변화 3.46(.77)로 부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예측에 동의하는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 비교한 결과는 긍정적인 변화와 부정적인 변화 모두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출산계획여부에 따라 나눈 4 집단, 즉 나와 배우자 둘다 원함, 나만 원함, 배우자만 원함, 둘다 원치않음에 따라 긍정적, 부정적 변화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부정적인 변화(F=5.800)가 p<.001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3.58, 3.63, 3.09, 3.43). 취업여성과 비취업여성의 경우 긍정적인 변화에 대해서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3.29/3.05, t=2.064). 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이를 본 결과 부정적인 변화에 대하여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3.52/3.32, t=2.272). 즉 취업여성은 비취업여성에 비해 저출산 현상을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주관적 경제수준의 지각이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에 비해 저출산 현상을 더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저출산 현상으로 야기되는 변화의 세부항목을 인구사회학적 배경에 따라 비교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면, 생활환경의 개선과 소비시장의 위축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생활환경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에는 여성이 더 동의를 하는 경향이 있으며, 소비시장이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에는 남성이 더 동의를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취업여성과 비취업여성을 비교한 결과, 자녀양육부담의 감소와 소비시장의 위축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자녀양육부담이 감소될 것이라는 전망은 취업여성이, 소비시장이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은 비취업여성이 더 동의를 하는 경향을 보였다.

경제수준에 따라서는 자녀양육 부담 감소, 국가경쟁력 약화, 가족해체 증가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났다. 또한 출산계획에 따라서는 생활환경의 개선, 국가경쟁력 약화, 소비시장 위축, 가족해체 증가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8> 저출산 현상으로 인한 변화

저출산변화	Mean (SD)	남성 (N=84)	여성 (N=276)	t-test	나와배우자 둘다원함 (N=98)	나만 원함 (N=51)	배우자만 원함 (N=52)	둘다 원치않음 (N=154)	F
생활환경의 개선	3.26 (.951)	2.93 (.991)	3.36 (.917)	-3.662***	3.23ab (.797)	2.84a (.967)	3.50b (1.0)	3.35b (.960)	5.127**
생활비감소	2.96 (1.116)	2.89 (1.006)	2.99 (1.131)	-.678	2.90 (1.14)	2.94 (.966)	3.06 (1.243)	2.98 (1.075)	.260
자녀양육 부담감소	3.31 (1.125)	3.37 (1.139)	3.30 (1.238)	.449	3.12 (1.151)	3.39 (1.204)	3.48 (1.321)	3.38 (1.205)	1.344
국가경쟁력 약화	3.61 (.996)	3.54 (1.009)	3.63 (.993)	-.708	3.71ab (.885)	3.82b (1.054)	3.27a (1.060)	3.58ab (.989)	3.130**
소비시장 위축	3.17 (.974)	3.39 (1.015)	3.10 (.953)	2.360*	3.24ab (.733)	3.43b (1.208)	2.86a (.881)	3.12ab (1.002)	3.211**
가족해체 증가	3.62 (1.083)	3.55 (1.020)	3.64 (1.103)	-.683	3.84b (.997)	3.67b (1.107)	3.13a (1.142)	3.61ab (1.074)	4.795**

저출산변화	취업여성 (N=110)	비취업여성 (N=123)	t-test	경제 수준하 (N=127)	경제 수준중 (N=116)	경제 수준상 (N=108)	F
생활환경의 개선	3.37 (.927)	3.31 (.924)	.525	3.17 (1.037)	3.41 (.884)	3.28 (.818)	2.042
생활비감소	2.93 (1.139)	2.87 (1.138)	.384	3.02 (1.125)	3.07 (1.117)	2.84 (1.069)	1.308
자녀양육 부담감소	3.58 (1.259)	2.98 (1.184)	3.787***	3.46a (1.311)	3.45a (.981)	3.11b (1.256)	3.051*
국가경쟁력 약화	3.55 (.973)	3.71 (1.024)	-1.206	3.78b (.898)	3.47a (1.017)	3.57ab (1.016)	3.126*
소비시장 위축	2.91 (.963)	3.25 (.964)	-2.681**	3.23(.953)	3.22 (.944)	3.05 (.990)	1.241
가족해체 증가	3.73 (1.162)	3.64 (1.056)	.574	4.07b (.964)	3.35a (.989)	3.35a (1.155)	19.436***

한편,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중인 혹은 시행을 고려중인 출산장려정책의 효과에 대해 전혀 효과적이지 않음에서 매우 효과적임까지 5점 척도로 구성하여 질문하였다. 전체적으로 산전후 휴가 및 육아 휴직 확대, 보육시설 확충 및 수혜 아동 확대, 그리고 자녀교육비 지원 및 자녀양육비 세제 감면, 이 새가지 정책을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9>

<표 9> 출산장려정책의 효과

출산장려 정책	Mean (SD)	남성 (N=84)	여성 (N=276)	t-test	나와배우자 둘다원함 (N=98)	나만 원함 (N=51)	배우자만 원함 (N=52)	둘다 원치않음 (N=154)	F
출산축하금	1.99 (.963)	1.68 (.887)	2.08 (.967)	-3.291***	2.11 (.929)	2.12 (.832)	1.75 (.926)	1.94 (1.021)	2.096
주거지원	2.76 (1.037)	2.83 (1.075)	2.74 (1.026)	.718	2.88 (1.008)	2.96 (1.172)	2.46 (.959)	2.73 (1.012)	2.559
자녀교육 양육비	3.20 (1.118)	3.16 (1.191)	3.22 (1.097)	-.418	3.28 (1.091)	3.29 (1.275)	3.10 (1.034)	3.21 (1.095)	.360
산전후, 육아휴직	3.47 (1.033)	3.29 (1.024)	3.52 (1.032)	-1.768	3.46 (.986)	3.41 (1.117)	3.33 (1.043)	3.56 (1.029)	.769
보육시설	3.44 (1.179)	3.28 (1.240)	3.49 (1.158)	-1.409	3.41 (1.225)	3.57 (1.080)	3.40 (1.209)	3.46 (1.167)	.245
건강보험	2.57 (1.020)	2.55 (.918)	2.58 (1.050)	-.241	2.74 (1.058)	2.69 (.847)	2.37 (1.067)	2.49 (1.031)	2.184

출산장려정책	취업여성 (N=110)	비취업여성 (N=123)	t-test	경제수준 하 (N=127)	경제수준 중 (N=116)	경제수준 상 (N=108)	F
출산축하금	1.95 (.966)	2.10 (.891)	-1.250	2.01 (1.012)	2.05 (1.003)	1.90 (.853)	.752
주거지원	2.58 (1.136)	2.82 (.906)	-1.786	2.84 (1.058)	2.68 (1.147)	2.76 (.906)	.697
자녀교육 양육비	3.29 (1.176)	3.13 (1.071)	1.093	3.14 (1.152)	3.32 (1.084)	3.15 (1.150)	.958
산전후, 육아휴직	3.70 (1.0)	3.41 (.991)	2.184*	3.36 (.962)	3.50 (1.099)	3.55 (1.071)	1.026
보육시설	3.63 (1.18)	3.40 (1.11)	1.522	3.40 (1.238)	3.44 (1.106)	3.51 (1.227)	.247
건강보험	2.45 (1.02)	2.64 (1.04)	-1.376	2.46 (1.082)	2.67 (.994)	2.55 (.970)	1.270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라 차이가 나는 항목을 살펴본 결과, 성별에 따라 출산축하금, 그리고 여성의 취업여부에 따라 산전후 휴가 및 휴직 항목 이외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여성이 남성보다 출산축하금 지급이라는 정책이 더 효과적이고 응답하였으나 평균 자체가 대체로 효과적이지 않은 수준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어 보인다. 그리고 취업여성이 비취업여성보다 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확대를 더 효과적이라고 응답하였다.

한편, 본인의 자녀출산여부에 대한 현재의 결정과 상관없이, 가장 매력적인 출산장려정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자녀교육비지원 및 자녀양육비 세제 감면(142명, 39.4%), 보육시설 확충 및 수혜 아동 확대(75명, 20.8%), 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확대(57명, 15.8%), 하나도 없음(48명, 13.3%), 아파트 우선 분양 등 주거지원 강화(30명, 8.3%)의 결과가 나왔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1명의 자녀를 둔 기혼남성과 여성을 대상으로 그들의 출산관련 행동과 저출산 현상이 지속될 때 야기될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정부가 내놓고 있는 소위 출산장려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 참가한 기혼남성과 여성이 생각하는 이상자녀수는 2.04명으로 2000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2.2명보다 낮았으며 앞으로의 출산계획은 본인과 배우자가 둘 다 자녀를 더 원하는 경우가 98명(27.2%), 본인과 배우자 둘 다 더 이상의 자녀를 원치 않는 경우가 154명(42.8%)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본인만 원하는 경우, 배우자만 원하는 경우도 각각 14%정도의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 경우는 출산여부와 상관없이 부부사이에 심각한 의견 차이를 유발함으로써 잠재적인 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다고 보여진다.

둘째, 더 이상 출산을 하지 않는 이유로는 개인적 시간이나 활동의 제약, 육체적 정신적 부담, 그리고 경제적 부담이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어 출산이 부부에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담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국가 경쟁력의 향상을 위해 여성에게 출산을 장려하는 것은 재고를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생산활동인구의 감소를 막기 위해서는 여성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증가시키는 방안이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이를 낳고 싶어도 불임인 부부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불임 발생률이 15~20%정도로 100쌍중 15~20쌍은 아이가 생기지 않아 고민하고 있으며 유배우 가임여성 중 불임에 노출되어 있는 부부는 전국 총 63만 5천명으로 추계되고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불임부부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불임시술비는 현재 의료보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저출산을 이미 경험한 외국의 경우 출산율이 2.0 이하로 떨어지는 시점부터 범국가적으로 시험관 아기 시술에 대해 전폭적으로 지지해주고 있는 것은 현재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출산을 하기를 원하는 이유로는 형제자매의 필요성이 압도적인 중요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변사람으로부터의 권유 및 압력, 그리고 자녀는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이 그 다음 순위를 보이고 있고, 부모역할에 대한 만족감이 4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과연 이것이 출산을 하는 이유로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자녀출산에 대한 부부간의 의견차이는 보통 이하의 심각성 정도를 보이고 있으나, 출산계획에 따라, 즉 둘 중 한사람만 자녀를 더 원하는 경우 그 정도가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배우자 애착의 수준도 본인만 자녀를 더 출산하기를 원하는 경우 가장 낮게 나타나 1명의 자녀를 둔 기혼남성과 여성이 배우자와 자녀출산 여부에 대해 의사소통을 하고 의사결정 및 합의를 이루는 과정이 중요함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넷째, 저출산 현상이 계속될 때 예측되는 변화에 대해 부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예측에 동의하는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가족해체가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에 가장 높은 우려를 표시하였으며, 자녀양육 부담이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에 가장 긍정적인 동의를 보고하였다.

다섯째,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중인 혹은 시행을 고려중인 출산장려정책의 효과에 대해 산전후 휴가 및 육아 휴직 확대, 보육시설 확충 및 수혜 아동 확대, 그리고 자녀교육비 지원 및 자녀양육비 세제 감면, 이 새가지 정책을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수준이 보통을 약간 넘는 수준으로 현재의 출산장려정책이 과연 효과적일지 의문스럽다. 또한 자녀를 단산하는

이유로 경제적 부담이 많이 언급이 되었는데, 경제수준에 따라서 출산장려정책의 효과에 아무런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점도 주목할 만하다. 또한 현재 시행중인 육아휴직 제도를 보더라도 실제로 이 제도를 활용하는 비율이 낮은 것은 상사나 동료의 눈치, 원직 복직이 되지 않을까 두려워서, 주위에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서, 승진 등 인사상의 불이익 때문이라는 연구결과가 보고되기도 하였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 2002). 따라서 여성에 대한 차별적 관행을 개선하고 산전후 휴가 및 육아 휴직 확대, 보육시설 확충 및 수혜 아동 확대, 그리고 자녀교육비 지원 및 자녀양육비 세제 감면 등의 정책의 목적은 '출산장려'라기 보다는 여성에게 일할 권리를 보장해준다는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저출산현상에 대한 연구가 인구학적 관점에 집중되어 있었던 점과 저출산을 문제지향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부부, 기혼남성과 여성 당사자의 의식을 살펴본 점, 그리고 자녀출산과 관련하여 배우자와의 의견차이나 그 심각성 정도, 그리고 배우자 애착이라는 부부관계의 특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출산이 부부의 공동의 관심사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부부를 쌍으로 모집하지 못한 점, 그리고 가족학적 관점에서 수행된 저출산 연구가 극히 부족한 실정에서 측정도구가 좀 더 정교하게 개발되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참고문헌]

- 김승권(2002). 저출산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장단기 정책 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승권(2003). 한국사회의 출산을 추락과 향후과제. **WelHealth Research**, 6, 1-17
- 전광희(2002). 한국의 저출산: 추이와 전망. **사회과학연구**, 13, 305-323.
- 전효정(1996). 갈등해소방법과 결혼적응도: 애착 유형, 비교수준과 동기의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창간호, 57-82.
- 한국노동조합총연맹(2002).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 실태 조사 보고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3). 우리나라 불임 및 불임관련 의료이용실태와 문제해결을 위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 한유미·곽혜경(2004) 현대 한국사회의 출산율저하와 여성사회참여. **한국생활과학회지**, 13, 29-40.
- 황은(2003). 성인기 애착 측정의 배우자 애착 측정 활용에서의 문제점에 대한 고찰.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 13-25.
- 경향신문. 2003. 7. 11
- 서울경제. 2002. 9. 13
- 여성신문. 2001. 7. 27
- 중앙일보. 2001. 7. 11

저출산 가정의 출산행동 및 배우자 애착

전 길 양(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수)

최근 우리나라의 급격한 출산율 저하는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종합적인 정책 수립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출산력 저하에 따른 한국 사회의 인구변천과 관련해서 학계나 관련부처에서는 여러 측면의 원인과 대책을 논의하고 있으며, 다양한 정책방향을 재점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의 <표 1>에서도 살펴보듯이 우리사회에서 “여성 한명이 가임기간(15-49세)동안 평균적으로 출산하는 자녀수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은 1960년에는 6.0명에서 1983년에 인구의 대체수준 이하인 2.1명에 도달한 후 2002년에는 1.17명, 2003년 1.19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경향은 주요국과 비교해 볼 때<표 2> 일본, 이탈리아, 독일 등과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출산의 심각성은 무엇보다도 인구학적 변화 및 사회적 복지비용의 대책마련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구학자들은 저출산이 고령화에 결정적 영향을 미쳐 2004년 현재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8.7%, 2019년에는 노인인구비율 14%의 고령시대로 예측하며, 100년 후 인구 1700만명 시대임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표 1> 합계출산율의 변화 (단위: 여자 1인당 명)

연령	1960	1974	1983	1987	1990	1996	1999	2000	2001	2002	2003
합계											
출산율	6.0	3.6	2.1	1.6	1.6	1.71	1.42	1.47	1.30	1.17	1.19

출처: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 연도별 자료

<표 2> 주요국 합계출산율

		한국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합계출산율 (명)	2003년	1.19	1.29	-	1.73	-	-	-
	2002년	1.17	1.32	2.01	1.65	1.88	1.26	1.40
	2001년	1.30	1.33	2.03	1.64	1.89	1.25	1.35

출처: 통계청(2004). 2003년 출생·사망통계 결과

한국에서의 출산을 저하 문제는 이미 저출산을 먼저 경험한 선진 외국의 사회정책을 참고하여 한국적 상황에서의 새로운 방향으로의 합의 도출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사회에서 저출산 문제는 이제 가계 각층에서 대안을 논의하는 국민적 의제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를 가족의 테두리 안에서 짚어보고 특히 인구학적인 접근에서 벗어나서 부부 또는 가족의 의사결정의 문제로 접근한 본 연구의 시각은 매우 시의 적절한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많은 가족에서, 결혼 후 자녀출산의 의사결정이 1자녀 이상을 더 낳을지의 문제에서 절실하게 다가온다는 점에서 이미 1자녀를 가진 가족을 대상으로 출산행동 및 인식을 살펴보는 것은 출산관련 복지 및 인구정책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연구의 이해를 돕고자 다음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반적으로 연구결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의 제시나 해석부분에서 보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표3>의 경우, 유의한 차이가 발견된 변수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설명이나 <표 4> <표 5>의 재구성이 이루어진다면 연구결과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도모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즉 출산계획에서 성별과 여성의 취업여부가 갖는 의미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또한 단산이유, 출산이유 등은 본문에 제시된 결과와 표에 제시된 결과들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 더 좋을 듯 합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와 3순위 안에 많이 제시된 빈도가 혼합되어 연구 결과에 대한 이해를 혼란스럽게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인식 결과도 전체로 묶어서 살펴본 긍정적, 부정적 변화에 대한 설명과 세부항목에 대한 설명(표 8) 모두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설명이 보완되었으면 합니다.

둘째, 자녀출산에 대한 부부간의 의견차이와 출산계획간의 분명한 설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얼핏 보기에 두변수간의 독립성이 잘 나타나지 않아서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자녀출산에 대한 부부의견차이의 심각성과 나와 배우자의 출산계획(둘다원함, 둘중한사람원함, 둘다원하지 않음)에서 부부간에 어느 쪽이든 합의가 있더라도 잠재적 갈등의 여지가 다르다는 설명이 나타나고 있는데, 영역별 빈도나 그래프로 이에 대해 좀 더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제시될 수 있으면 좋을 듯 합니다.

셋째, 본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킬 수 있는 결과제시가 가능하다면 본문이나 논의 부분에서 더 제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즉 가족의 구조적인 어떤 특성이 부부의 출산행태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내는 부분이 제시된다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저출산은 교육비를 포함하여 양육비 부담만으로 설명될 수 없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도 경제적, 정신적, 육체적 부담 및 개인적 시간이나 활동의 제약 등이 출산을 하지 않는 주요 순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구 사회에서는 기본적으로 여성이 일하면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첫아이 때 부부간의 육아협력의 유무가 두 번째 아이를 낳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도 출산장려정책이 여성에게 일할 권리를 보장해준다는 차원에서 논의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논의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결과들이 보완되었으면 좋을 듯 합니다. 취업과 비취업 여성의 출산행태에서의 차이, 첫아이 육아 협력 정도나 인식 혹은 출산계획(둘다 원함, 원하지 않음, 한쪽만 원함)의 부부의사결정에 대한 변인들의 영향을 빈도나 그래프를 통한 간결한 제시도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것으로 생각합니다.